

신고는 간단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쉽고 편리한 신고절차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국외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시면 바로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자격

- 신고대상 : 전신납북자(6·25전쟁 납북자)

6·25전쟁 납북자의 정의 (법 제2조)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6.25 ~ 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

- 신고자격 :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신고기한 : 2014.12.31일까지
- 신고방법 : 신고인이 거주지 시·군·구청(국외는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 신고
- 구비서류 : 주소지 가까운 시·군·구청에 비치

1. **납북피해 신고서**(신고인이 신고처를 방문하여 직접 작성)
신고인, 납북자 성명, 생년월일, 납북당시 나이·거주지·직업, 성별,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가족관계 증명서**(납북자 또는 신고인 본인)
신고인의 거주지 시(구)·읍·면·동에서 직접 발급
3. **제적등본**(납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 가능한 것)
신고인의 거주지 시(구)·읍·면·동에서 직접 발급
4. **납북경위서**(신고인이 신고처를 방문하여 직접 작성)
납북 상세 경위, 납치 후 소식, 납북피해 사례 및 건의사항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5.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신고인 직접 확보)
납치자 명부 사본,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재직증명서 등을 신고인이 확보하여 제출

6·25전쟁 납북자 명부 확인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www.abductions625.go.kr
- (사)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www.kwafu.org

6·25전쟁 납북자에 해당되시는 분 중에 1950~1963년 사이에 발행된 6·25전쟁 납북자 주요 명부나 이산가족 명부에 등재 되신 분들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6·25전쟁 납북자 신고 처리절차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를 하시면 각 시·군·구 및 재외공관을 통해 서류가 시·도 실무위원회로 이관되어 1차 사실조사를 하고 위원회에서는 2차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 완료 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심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신고인에게 통지되는데 최소 150일, 최장 360일이 소요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심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 시·군·구 및 재외공관
신고처 : 전국 시·군·구 및 재외공관
신고 구비서류 확인

1차 사실조사

- 시·도 실무위원회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 1차 사실조사

2차 사실조사

- 위원회
보증인 면담, 관련 자료조사 등
2차 사실조사, 소위원회 예비심사

심사·결정

- 위원회
신고관련 서류가 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결정
※ 90일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 가능

6·25전쟁 납북자 결정 통지

쉽고 간단한 6·25전쟁 납북자 신고
상담전화 1661-6250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납북자 가족 무료법률 지원

- * 기간 : 2014. 1. 1 ~ 위원회 존속 기간까지
- * 대상 :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된 자의 가족
- * 내용 : 6·25전쟁 납북자 「**실종신고 심판청구**」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구. 호적정리)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

- * 신청 준비서류(6종)
① 6·25전쟁 납북자 결정 통지서
② 가족관계 증명서
③ 기본증명서(납북자)
④ 말소주민등록등본(납북자)
⑤ 주민등록등본(신청인)
⑥ 인우보증서

- * 신청 : 주소지에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신청** (전국 122개소에서 접수)
- * 문의전화 : ☎ **132** (전국 어디서나)



2014년
12월말까지
기한 연장



6·25전쟁 납북자 신고

지금 신고하세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희생자 추모 등 명예회복 사업 대상으로 등재
- * 6·25전쟁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등 무료법률 지원

위원회 홈페이지
www.abductions625.go.kr

문의전화 **1661-6250**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2014년
12월말까지
기한 연장

6·25전쟁 납북자 신고 쉽고 간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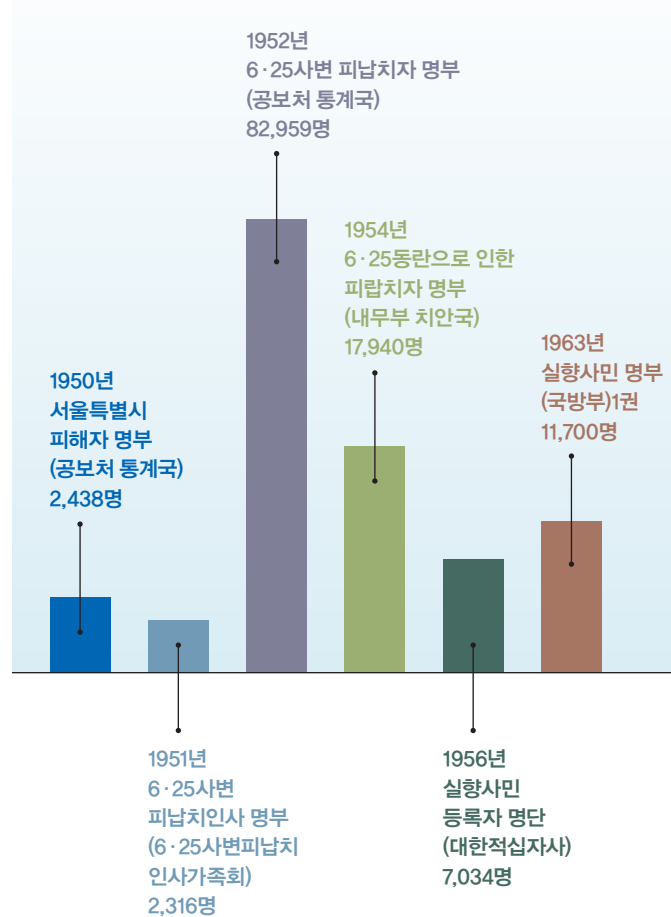
6·25전쟁 납북자 신고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가슴에 묻은 세월만큼
큰 희망을 얻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6·25전쟁 납북자 수 10만여 명

북한은 6·25전쟁 중 정치적 목적으로 상당수의 유력인사를 납치하는 한편, 부역동원 및 인민군 충원(의용군)을 위해 8~10만 명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발발 직후부터 196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납치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 왔으며 현재는 이를 6·25전쟁 납북자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섰습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 목적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입법경과 및 현황

- 18대 국회에서 김무성, 박선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 본회의 통과 (2010.3.2)
- 법률 공포 (2010.3.26)
- 법률 시행 및 시행령 공포, 위원회 사무국 업무개시 (2010.9.27)
- 위원회 출범회의 및 사무국 개소식 (2010.12.13)
- 납북피해신고 접수 개시 (2011.1.3, 사·군·구 및 재외공관)
- 납북피해신고 접수 기한 연장 (2014.12.31까지)

※ 2013.12.31기준 4,110명 피해신고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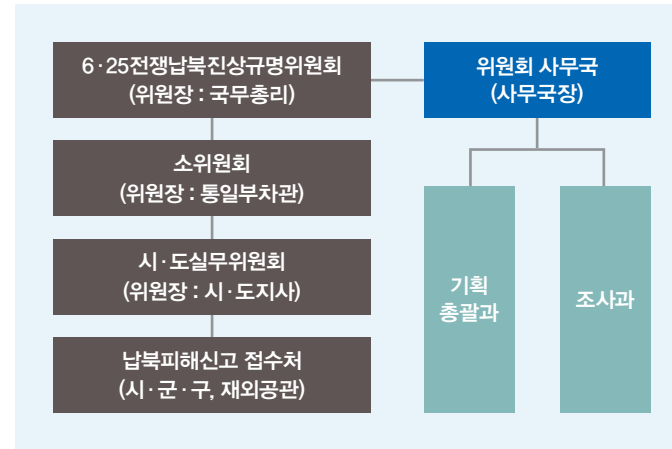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 소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정부기관으로서 전체회의, 소위원회, 시·도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 국내외 납북피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납북자 심사·결정,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 납북자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www.abductions625.go.kr>

위원회 조직 및 구성



위원회 회의체

전체회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전문가 6명, 전시납북자 가족대표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1회 6·25전쟁 납북자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장급 공무원 등 정부위원 3명과 민간전문가 3명, 전시납북자 가족대표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월 1회 6·25전쟁납북자 예비심사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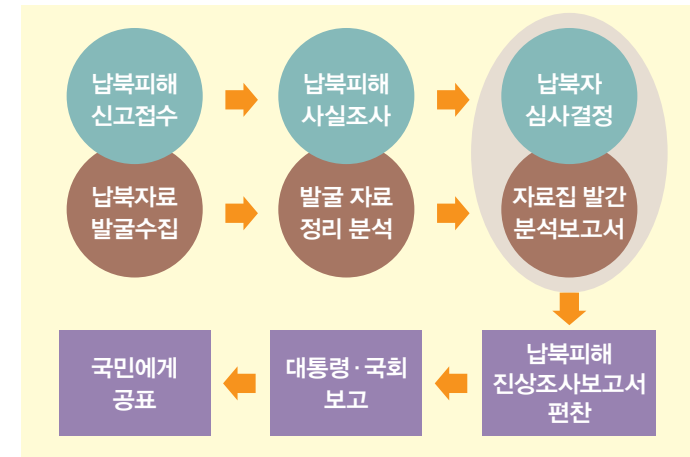
시·도 실무위원회

해당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전시납북자 가족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수시로 6·25전쟁납북피해신고 접수 전에 대한 1차 사실조사 및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납북피해 진상규명-납북피해자 명예회복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시행을 계기로 정부는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을 목표로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사업

- 6·25전쟁 납북 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연구
- 6·25전쟁 납북피해 사실조사 및 심의조서 작성
- 전국 권역별 6·25전쟁 납북자 실태조사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편찬

명예회복 사업

- 6·25전쟁 납북자 심사·결정
- 6·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 건립사업
- 6·25전쟁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
-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 개최 등 기념사업 추진
- 6·25전쟁 납북자 가족 정부행사 초청



위원회



전체회의



소위원회



시·도 실무위원회

진상규명 사업



명예회복 사업